

## 산림복원에 필수 자생식물 공급기반 구축 '박차'

기사입력 2021-12-22 10:54

산림청, 21일 '자생식물 복원소재 공급체계 구축방안' 수립...2022년 섬 숲 등 대상 복원사업 더욱 확대  
 통일 대비 북한의 황폐된 산림복원 위한 종자 확보...접경 지역 북한 묘목지원 양묘시설 활용 묘목 생산



산림청은 우리나라 산림에 알맞은 자생식물의 보급과 확산을 위해 '자생식물 복원소재 공급체계 구축방안'을 어제(21일) 수립했다고 밝혔다. (사진=산림청 제공)

[대전=매일경제TV]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우리나라 산림에 알맞은 자생식물의 보급과 확산을 위해 '자생식물 복원소재 공급체계 구축방안'을 어제(21일) 수립했다고 밝혔습니다.

유엔은 오는 2030년까지 '생태복원의 해'로 선언하고 생태계복원 10개년 계획(UN Decade on Ecosystem Restoration)을 추진 중입니다.

우리나라는 백두대간, 비무장지대(DMZ) 일원 등 핵심생태 축을 중심으로, 산림복원사업(96ha/년)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2년에는 섬 숲 등을 대상으로 복원사업을 더욱 확대할 계획입니다.

반면 산림복원사업에 사용되는 종자는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종자 수입에 따른 외래종 증가, 위해식물(돼지풀, 미국쑥부쟁이, 애기수영, 단풍잎돼지풀, 가시박 등) 혼입으로 국내 산림생태계 교란과 인체 알레르기 유발 등 사회·경제적 피해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번 방안은 '자생식물 소재 공급기반 확립으로 산림생태계 건강성 회복'이라는 비전 아래 ▲자생식물 관리체계 마련 ▲자생식물 인증/공급 센터 운영 ▲자생식물 소재산업 육성기반 구축 ▲북한 황폐산림의 복원 등 4대 전략을 주요 골자로 합니다.

첫째, 자생식물 관리체계를 마련합니다.

기후대 등을 고려해 종자이동구역(Seed zone)을 구축하고 자생식물 종자수집구역을 선정, 유전적 다양성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또 종자수집부터 유통까지 자생식물의 이력을 추적할 수 있는 이력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고품질의 자생식물 보급을 위한 품질인증제도를 운영합니다.

둘째, 자생식물 인증·공급센터를 운영합니다.

자생식물 인증센터를 지정해 종자 품질검사·인증을 수행합니다.

종자 수집, 증식, 저장, 묘목생산, 공급을 수행하는 공급센터를 지정·운영합니다.

공급센터를 중심으로 지역 위탁생산·연구 등을 위한 지역협의체 구성으로 지역의 소득·일자리 창출을 도모합니다.

셋째, 자생식물 소재산업 육성기반을 구축합니다.



산림청은 우리나라 산림에 알맞은 자생식물의 보급과 확산을 위해 '자생식물 복원소재 공급체계 구축방안'을 어제(21일) 수립했다고 밝혔다. 산림부 생산설비. (사진=산림청 제공)

산림에서 도시 외곽·도심으로 복원대상지를 확대하고 정원사업 등 산림사업에 자생식을 활용 등 자생식물 소재 시장을 확대합니다.

자생식물 소재의 생산·유통 공정 전반에 대해 민간기업 참여를 확대, 민간주도의 관리체제로 전환합니다.

넷째, 북한의 산림황폐지 복원을 위한 기반을 조성합니다.

통일 대비 북한의 황폐된 산림(262만ha)의 복원을 위한 종자를 확보하고 접경지역의 북한 묘목지원 양묘시설을 활용해 묘목을 생산합니다.

양묘시설은 국유 3개소(고성, 파주, 철원)와 민간 2개소(화천 미래숲, 철원 통일양묘장)가 있습니다.

한반도 산림생태계의 남북한 복원을 위해 실무회담을 통해 남북공동 산림자원 실태조사·훼손산림 복원 등 협력방안을 마련합니다.

임상섭 산림청 산림보호국장은 "자생식물은 산림의 생태적 건강성 확보를 위한 기초"라면서 "자생 식물 종자 공급체계 구축으로, 지역 소득을 창출하고, 나아가 종자 산업으로 육성되도록 추진해가겠다"고 전했습니다.

[박희승 기자 / mkheesking@mk.co.kr]